



## VI. 中共經濟의 展望

### 1990年代의 中共經濟動向

이제부터 21세기에 걸쳐서 중공의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가 있기는 하나 거의 확정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아마도 최대의 문제가 될 경제기관과 성장율간의 모순을 시행착오적으로 조정하면서 점차로 안정된 성장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이될 것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시작된 「경제의 자유화」정책은 이른바 「노·리턴·포인트」(되돌아갈 수 없는 점)를 넘기고 있으며, 재차 「인민공사」가 지난날의 형태로 재현 된다는가 혹은 문화혁명 중에 볼 수 있었던 형식적인 「평등주의」를 부활시키는 조짐은 현재로서는 찾아볼 수 없다.

중공의 정치체제를 본다면도 현재의 지도부는 이미 82세의 고령에 달한 鄧小平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胡耀邦, 趙紫陽등 총서기, 수상이라는 중심적인 포스트에 있는 지도자와 鄧小平의 입김이 미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鄧小平이 사망한 뒤 정치체제가 일거에 역전할 위험을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으나 이미 엄격한 통제를 폐지하고 「경제의 자유화」의 진행으로 능력과 수완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수입을 늘려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현상에서는 이전의 「평등주의」적인 정책을 한꺼번에 부활시킬 전망은 거의 없다. 만약 이러한 시도를 중공의 지도부가 취하게 된다면 그것이야 말로 역으로 정치적 혼란이 전국 도처에서 발생하여 경제상태는 악화하고 정치의 안정을 바란다는 「평등주의적인 정책에의 변환」 그 자체가 거꾸로 정치체제의 불안정을 일으키는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의 자유화」정책이 진행함에 따라 빈부의 격차는 확대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부자가 되겠다」는 기분에 들떠 전국적 또는 어느 계층에서도 오직 직권남용, 중수회 혹은 중앙의 통제와 법률을 무시하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拜金주의」가 만연하여 중공공산당의 간부를 포함하여 행정기구의 책임자들에게도 오직 부패의 기풍이 확대할지 모른다.

아마도 10년전의 중공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것같은 이같은 혼란상태 그 자체를 중공 공산당의 기강을 부정하는 동향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경제성장에 따르는 활기를 위한 회복 현상이라고 보느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것이나 일단 불이 붙은 이러한 기풍을 억제하고 방침을 전환하는데 충분한 지도자가 毛澤東의 사망 후, 없었다는 것도 「경제의 자유화」 노선을 앞으로도 계속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될 배경의 하나이다.

### 「香港의 中共化」가 아니라 「中共의 香港化」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香港의 主權반환」이 결정된 오늘날에 中共의 지도부로서는 첫째 「국제신용의 회복과 확립」이 가장 우선하지 않으면 안될 정책과제이다. 동시에 현재 香港에서 볼 수 있는 「경제활동의 자유」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이상 오히려 역으로 중공본토에 香港과 같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일정한 범위내라도 실현시켜 香港의 주민이 형수하고 있는 생활수준과 너무나도 차가 많은 중공본토의 생활수준간의 격차를 축소하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1997년을 맞이한 후 香港의 번영과 중공본토의 빈곤한 생활상태의 두 양상이 같은 국가내에 존재한다는 심각한 사태가 될 것이다.

이 「경제의 자유화」 노선은 어느 의미에서는 「香港의 中共本土化」가 아니라 거꾸로 「中共本土의 香港化」라는 방향으로 중공의 정치체제를 전환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이기도 하다.

「중공본토의 香港化」는 현재 香港에서 정치상의 권리가 모두 영국정부에 의해 독점되고 香港의 주민(이 가운데 98%가 중공계)에게는 「경제활동의 자유」만 보장되고 있다는 상태는 이미 말한바와 같이 영국정부를 대신하여 중공이 정치상의 권리를 모두 독점한다는 패턴을 香港에 쉽게 갖고 들어가기 위한 전제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같이 중공본토에서도, 정치의 실권은 중국공산당이 쥐고 일반대중에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가능한한 넓은 범위에 걸쳐 보증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중공본토의 香港化」와 같은 상태로 중공본토 전체가 移行하는 것도 된다.

물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의 경제 활동에 대한 개입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계획경제」 체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며 또 자유경쟁에 대한 민간기업

의 허용범위를 어느만큼 하느냐 즉 陳雲이 말한 「새장속의 자유」의 크기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 최대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현실로 시행되고 있는 행정적인 수단에 의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에도 자연 일정한 한계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로 음식점, 소규모의 운송업무, 그리고 양복의 재단, 수리, 가전제품의 수리업무등 소형 서비스업무를 중심으로 한 「민간기업」에는 설립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해도 앞으로 개인기업이 점차 성장하여 몇 사람의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는 즉 타인의 노동으로 이익을 올리기로 하는 자유가 인정된다면 자연스럽게 규모가 큰 민간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 “새는 새장에서 뛰쳐 나가기를 바란다”

이러한 자유로운 민간기업이 무제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전국적인 유통루트에도 진출하여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게 되면 국유기업과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민간기업과 국유기업과의 경쟁에 정부가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면 물론 국유기업들은 점차 경쟁에서 패배하고 시장에서 구축될 것은 틀림이 없다. 그래도 또 정부가 정치권력을 행사하여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새장속에 있던 새들은 새장의 망을 뚫고 자유로운 천지로 날아갈 것이다.

현재로서는 아직 민간기업은 이러한 단계에 까지 발전하지 않고 있으므로 문제는 표면에 나오지 않고 있으나 가족노동 외에 몇 사람인가의 종업원의 고용을 인정하는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존속한다고 하고, 종업원의 수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고 한다면 곧 수백명 수천명의 노동자 종업원을 고용하는 대규모의 민간기업이 속속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공의 지도부는 이러한 것을 예측하고 있는지 없는지, 현재 전해진 바로는 민간기업에서 고용하는 수를 지역에 따라 5명 혹은 10명으로 제한하는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듯 하나 이 조치가 과연 법

블적으로 또 전각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서 시행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가령 종업원의 수를 5명 혹은 10명으로 제한해도 자유로운 민간기업이 그 규제의 망을 뚫는 지혜를 생각해 낼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경제의 흐름은 일단 규제가 완화되고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인정되었을 때는 법률의 힘으로 그 활동의 범위를 한정하고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다.

일당독제체제하에 있어서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1920년대초, 레닌이 이끄는 소련정부는 내전의 종결과 함께 戰時공산제를 없애고 「내프」라고 하는 신경제방식을 도입하여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했다. 불과 수년 사이에 「내프·멘」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민간기업체가 속출하여 순식간에 소련의 국내시장에서 강대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레닌이 죽은후 발생한 이러한 민간기업의 급속한 발전에 소련공산당은 강권을 행사하여 억압하는 정책을 취하여 1928년 제 1차 5개년계획이 발족하기 직전까지 「내프·멘」은 금융면에서 세제면에서 강력한 압력을 받고 거의 시장에서 구축되고 말았다. 소련의 이러한 경험에서 비추어 보아도 중공공산당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제의 자유화」 노선을 철저히 실행하려고 했을 경우 생산의 확대, 경쟁성장의 향상이 높아질 것은 확실하나 일면 공산당의 일당독제체제를 밑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자유로운 민간기업」의 속출을 과연 방임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점은 앞으로의 과제로서 중공의 지도부를 무겁게 덮쳐 누를 것이다.

「내프」일 때는 소련공산당은 국제시장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이른바 「一國社會主義」의 노선을 취할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따라서 중공과 같이 「香港의 主權返還」을 성공시킬 필요와 국내에서의 「경제 자유화」 노선의 추진에 의한 「자유로운 민간기업」의 급속한 성장과의 밸런스를 어디에서 잡느냐 하는 조정하기 어려운 과제를 소련공산당은 안고 있지 않았다.

아마도 이제부터 1997년까지의 11년간에 중공공산당의 지도부는 「경제의 자유화」 노선을 중도에서

끊고, 재차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혹은 「평동주의」적인 발상에 기인하는 「계획경제」체제로 재 전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 모른다. 따라서 1997년 香港의 주권이 반환될 때 까지는 지금의 노선을 그대로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 중공의 국내에서는 급속한 「자유로운 민간기업」이 성장하고 경영 능력이 약한 국유기업을 국내시장에 점차로 압박할 수 있는 때까지 잘 공산이 크다고 하는 것은 1997년 「香港의 주권반환」이 실현된 후 영국과의 공약에 기인하는 「1國2制度」의 원칙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공산당의 일당독제체제의 원칙에 따른 경영 운영, 즉 「경제의 자유화」 노선을 폐지하는 것도 심본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920년대의 「내프」시대와는 달리 21세기 개 걸쳐서 세계전체의 흐름은 명백하게 동쪽에 대해서, 서쪽의 우위, 남쪽에 대해서 북쪽의 우세를 더욱 눈에 띄게 하는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상징이 「정보화사회」의 선진공업국의 정착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중공 공산당이 공산당의 일당독제체제의 원칙을 끝까지 유지하고 판권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중공의 경제성장을 전면적으로 저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지 모른다 「경제의 자유화」노선이 앞으로 10년 이상이나 계속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성장한 「자유로운 민간기업」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외국무역 혹은 외국 자본과의 합병기업설립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명의는 국유기업의 이름아래 실질적으로는 국유기업의 이름아래 실질적으로는 국유기업을 민간기업의 경영자가 대신하여 외국자본과 합병기업을 설립할 움직임이 만약 발생했다고 한다면 「경제의 자유화」노선이 국내시장에 한하지 않고 해외시장에도 결부되어 더욱 국유기업은 민간기업 보다도 열세한 입장에 쫓기고 말 것이다.

물론 거대한 생산설비와 막대한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중공업 혹은 사회자본의 분야에서는 공산당의 정치력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으니 이러한 분야에 까지 민간기업이 진출하는 장면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해도 유통, 서비스, 그리고 섬유, 플라스틱 가공 정도의 가전제품등 자유로운 민간기업이 보다

